2020 서울교육정책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

서울 학생 방과후활동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학교를 품은 마을, 마을과 하나되는 학교

2020.12.18(금) 14:30 ~ 17:00

유튜브에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검색

채널에 입장하여 시청가능 YouTube LIVE



주 최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주 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SEPI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0 서울교육정책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

[서울 학생 방과후활동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학교를 품은 마을, 마을과 하나되는 학교

▣ 프로그램

발제: 서울 학생 방과후활동의 현황과 방향을 말하다

시간	세부내용 및 발표자	
14:30~15:50 (80분) 사회: 박상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방과후활동의 과제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해외 방과후활동 사례와 시사점
	조대진(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서울형 방과후활동 정책 제안
	홍제남(오류중 교장)	학교공간을 방과후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오류중학교 운영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방과후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 공원

토론: 서울 학생 방과후활동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시간	토론
16:00~17:00 (60분) 사회: 박상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조대진(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홍제남(오류중 교장)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목 차

CONTENTS

주제발표

▶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방과후활동의 과제 ····· 3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해외 방과후활동 사례와 시사점 ····· 19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 서울형 방과후활동 정책 제안 ····· 31
조대진(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학교공간을 방과후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로 : 오류중학교 운영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43
홍제남(오류중 교장)

▶ 방과후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 공원 ····· 61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주제 발표 1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방과후활동의 과제

이 희 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주제발표1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방과후활동의 과제[1)]

이희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으로서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중심 방과후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교육·복지·문화의 공적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시스템인 교육생태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지역교육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미 각 지역별로 교육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등 교육생태계 구축을 활용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는 방과후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등에 대한 기대로 점차 강조되고 있다(이희현 외, 2019b; 박승재 외, 2017; 강신천 외, 2016).

본고에서는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학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교육·돌봄·여가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학생 방과후활동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의 주요 쟁점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목적 및 비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수단이며 목적은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려는 목적이 마을 자원을 학교에

1) 본 발제문은 「이희현 외(2020).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의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유입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즉 마을의 역할과 기능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학교는 지역사회를 소비자 또는 체험처로만 인식하게 되고 이때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지역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성장하고 상생한다는 가치가 공유되고 지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생태계 주체 간 관점 및 입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마을, 학생과 학부모, 시·군청 등 교육생태계 내에서 각각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관점과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마을에서는 학교 개방과 학교와의 연계를 원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개방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책임소재 불명확화를 이유로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며, 마을과 연계 시 실질적인 관련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학교교사와 마을교사와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지방 의회는 마을 교육자원이 공교육과 연계되기를 원하는 반면에 마을에서는 학교가 마을의 교육자원을 단순히 플레이어로 이용한다는 인식으로 불편감이 있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학업성취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각각의 참여주체들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과 서로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의 교사와 마을교사가 공동기획자가 되어서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주도로 마을학교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기존의 문·예·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학생·학부모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 수준별 프로그램, 프로젝트기반 프로그램 등 마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유사하게 사회적 기업 연계 방과후학교에서도 마을교사 자원과 학생 및 학교의 요구를 매칭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마을교사가 보유한 전문성 또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대학 연계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대학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자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있는 지역과 실제 대학소재 지역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요구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사와 마을 자원인 대학, 마을학교가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민·관·학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학교-마을 간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작동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교육생태계 및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의 작동은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마을활동가, 대학교수 등이 지역 교육문제에 대한 열린 구조로 예산 배분을 포함한 기획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작동이 필요하다. 한편 관의 행정사업으로써 추진되는 형식적인 협의회보다는 소규모 지역단위별로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한계 극복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교육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구청 직영으로 구청 내에서 작동하는 경우와 교육지원청 내 조직되어 행정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두 실질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관 중심의 조직 및 운영 보다는 지역 및 마을활동가가 개입하고 실행하는 민·관 연결구조로 조직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되, 자원 간의 역량 편차를 인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의 기본 원칙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개방성이다. 지역의 교육생태계 내 활동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투입되는 사업 및 예산에 종속되지 않고 자생력을 가져야 하며, 학생의 경험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원칙을 두되,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 성장과 상생의 순환구조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폐쇄적인 체제로는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기에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정성과 확장성이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학생·학부모의 새로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체제 내 또는 밖의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탄력성이다. 교육생태계 내에서의 소지역별, 학교급별, 학교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탄력적인 방과후학교 활동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상호 호혜성이다. 교육생태계 내에서의 연계와 협력은 모든 참여주체들의 공동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관계로 상승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① 교육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터전 마련

①-1. 방과후학교의 개념 확장을 통한 재개념화

실제 학생들의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다양하다.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각에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같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초학력보장, 스포츠클럽, 예술·체육프로그램, 다문화·탈북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등 다양한 유관 사업 내에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청들이 지원의 중심에 서서 이루어지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세종마을 공모사업 등 마을방과후학교 활동들도 있다.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밖 '방과후활동' 들도 있으며,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활동으로서 마을 '방과후활동' 영역도 존재한다. 또한, 영리적 목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순수한 교육기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방과후활동' 도 존재한다.

특히 학교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역은 방과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각기 운영 중에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주체별로 재원별로 구분할 실익이 별로 없다. 현장의 일각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교육 시간에 포함되는 교육활동도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에 이루어질 경우, 방과후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들은 모두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 및 돌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제에 기존의 학교 방과후학교나 마을의 방과후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과후활동 교육생태계 구축"의 단초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방과후학교를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학교와 지역, 방과후학교와 방과후활동의 벽을 허물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영역의 벽을 허물고 상호 연계 및 보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호 보상 체제라 함은 전술한 상호 호혜성이라는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희현 외(2019a: 189)는 '학교중심 방과후학교 체제'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새로운 '방과후학교'의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학교 안팎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이나 교육기부 등에 의해,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학교교육계획에의 반영'을 중심으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의 변화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사업들과 유사한 다양한 사업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1-2.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핵심 가치의 공유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교육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비전 및 목표가 명확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때 구성원들은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 준다.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핵심가치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하여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교육적 측면에서, 돌봄적 측면에서 그리고 여가적 측면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 '온 마을이 함께 하면서' 마을도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끔에 있어서 이 과정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면서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치현상 즉, 목적과 수단이 혼재되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잘못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와 변화에 따른 교육주체들 특히 학교의 부담과 우려를 감소시켜 줄 필요 또한 있다.

1-3. 핵심 주체의 발굴·양성 및 조직화

공동체 그리고 생태계의 안정적인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핵심주체는 누가 되는가? 결국 지역주민이면서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양성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있어 학부모의 성장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학부모는 교육의 주요 주체로서 학부모의 동의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학부모의 부정적 입장은 연계를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생과 지역의 교육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학생과 지역에서 필요한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는 강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문제는 단순참여를 넘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관계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학부모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인데 단위 학교들의 학부모회 및 각종 봉사조직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하면서 이들의 참여가 가져오는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교사들이 재직하는 학교가 속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 결국은 학교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논의하면서 실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식의 워크숍 및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교사 이외에 학생들도 핵심주체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이끌어나갈 주인공은 결국 학생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핵심주체 또는 최소한 강력한 지원세력이 될 때 지역의 교육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넘어 즉,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또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 교사, 학생으로부터 발굴되고 양성된 핵심주체들은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들을 하나의 힘으로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활동가(핵심주체)가 새로운 활동가(핵심주체)를 양성하고 이들이 함께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생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희현 외, 2019b: 254).

①-4. 중간조직의 구축 및 운영

관과 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조직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이 있다. 특히 관 주도 정책과 민 주도 정책이 각각 안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관련 정책 사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새로운 사업 및 인력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기능과 플랫폼의 기능을 할 기제(황준성 외, 2018: 281)로서 중간조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중간조직은 유용할 수 있다. 중간조직의 구축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1) 시·군·구청 또는 교육지원청 어느 일방에 '팀' 수준의 조직을 신설하고 다른 일방의 직원을 파견 받는 것, 2) 관의 산하에 재단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재단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것, 3) 민간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것, 4) 그리고 관련 주체들이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재단법인을 신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이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중간조직의 설치 및 운영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지역의 활동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성은 필수이다. 주민공동체가 활발한 곳에서 마을교육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방과후학교의 연계도 활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형태의 중간조직이던 주민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 자치활동 속에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② 방과후학교 운영의 혁신

②-1. 참여주체의 전문성에 기반한 분리적 접근

학교는 학교가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교과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특기·적성교

육, 여가활동, 돌봄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과 같이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영역도 존재함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리적 접근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방안을 제안함의 기저에는 최근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국가·사회적으로 돌봄 특히 온종일돌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방과후학교 자체보다는 그 속의 초등돌봄교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만 강조되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의 차별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방과후학교의 두 축인 교과 영역과 특기적성 영역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교과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교원이다. 따라서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보충학습이라고 한다면 방과후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활동은 학교 내에서 교원의 주관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등 교원 외의 인적자원이 담당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엄연히 학교 내에서 교원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이 합당하다. 반면에 문·예·체 등 특기적성 영역 그리고 놀이와 여가 등의 돌봄 중심이라고 한다면 지역 사회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 관련 활동을 전적으로 이관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학교가 소속한 지역이 도시 지역인지 농산어촌 지역 인지 등등 지역 사회의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지자체 중심형인 도봉구에서의 역할 분담도 도봉구청은 비교과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을 담당하고 단위학교는 교과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가 관내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마을방과후학교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초등의 문예체 등 특기적성 개발 및 돌봄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적 접근은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과도 맥을 같이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진단을 통해 수요를 확인해줌에 더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과 영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특기·적성 중심의 영역에 대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고유 역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주어야 한다.

2-2. 소지역단위 탄력적 운영

같은 시·군·구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소지역 별로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시·군·구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구시가인지 빠르게 변화하는 신시가

지인지, 아파트단지인지 단독주택단지인지, 농촌지역인지 산업단지지역인지 도농복합지역인지 등등의 차가 현존하며, 그 차이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가 양적・질적으로 다르고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의 차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 학교와 지역의 친밀도 등 같은 것을 찾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이것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과후활동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주민의 수요충족 및 효율성제고라는 차원 그것이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관련 정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희현 외, 2019b: 249 참고). 따라서 생활권역별로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함과 함께 수요를 조사하면서 수요와 공급 체제를 갖추는 등 생활권역 중심의 소지역 단위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방화후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3.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적절한 수요 분석 및 대응 체제 구축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측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 측이 역량을 갖추고 실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이미 충분한 공급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으로 코딩과 드론 등 보다 트랜디한 것을 원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신규 고용의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계를 원활하게 이끌 컨트롤 타워 및 플랫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2-4. 네트워크 내에서 가용가능 자원의 발굴과 실질적인 배움의 자원으로 개발

방과후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진학 교육 등 전통적인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생 중심 활동들도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교육 인프라와 사회적 배움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자원들을 찾아 정리하여 줌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보다 개방적인 시각으로 지역 내의 가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프로그램 및 컨텐츠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현재의 경력단절자를 발굴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 중 우수한 경력 단절자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도 지역 활

동에 있어서 공간은 단순한 회합의 장이 아닌 관계를 네트워킹 할 터전이 되는바 숨어 있는 공간들을 찾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하여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유관 사업들을 둘러보며 이것과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동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⑵-5.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도모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며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때, 그 모습은 지역이 끌고 학교가 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자의건 타의건 경험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방과후학교 활동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이웃과 함께 일하는 것도 돌봄이며 교육활동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의 연계 점을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활동 속에 어떤 의미를 투영시키고 이것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성을 갖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각 지역에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연계된 자원들을 잘 구조화하고 기획하여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교육과정)화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짐과 함께 실생활과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기획 능력과 프로그램화 과정에 익숙하지 못하며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보완해줄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성공적 사례를 축적해갈 필요가 있다.

⑵-6. 방과후학교 강사 역량 제고 체제 구축

지역연계 방과후학교에 있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프로그램, 콘텐츠의 낮은 질에 대한 논란이다. 그런데 프로그램 및 그 속의 콘텐츠의 질은 결국 누가 가르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이든 마을이든 방과후학교 참여인력 특히 강사의 질 제고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강사 역량 문제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강사들의 역량 신장과 함께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도 필요하다.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모임 지원, 강사 풀 연계·통합 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활용, 외부강사 처우개선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과 함께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자격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희현 외, 2019a: 280). 이와 같은 사례로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활동의 지도강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격을 국가 발행의 미성년자 지도 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7.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주로 행정부 관료들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독점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을 공유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에 영향력을 준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활동들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8.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

각각의 사업들은 제한적인 시간과 자원의 한계 속에서 매순간 선택의 과정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각 사업들의 추진 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그 성과들이 누적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크던 작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태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한편,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그 특성상 최종 결과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결과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과정과 단기적 산출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평가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환류되어 정책과정에 재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성공사례의 공유는 중요하다. 즉, 각 지역의 방과후학교 체계는 해당 지역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역의 수요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경험의 산물이다(이회현 외, 2019b: 245). 따라서 이러한 경험의 산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은 각 지역의 방과후학교 생태계가 풍성해지도록 지원함에 방점을 찍어야지 일부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정형화된 사례를 강제 이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회현 외, 2019b: 245).

3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3-1. 안정적 협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협약서 제도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는 학교의 벽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학교 내 시설·공간 등을 활용함에 안전사고 책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가 학교 개방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 공간을 포함한 자원 등을 공유하며 연계·협력함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사전에 확약해두는 '표준협약서'를 갖추는 것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다툼의 사례들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원칙들을 문서화하여 활용하는 「학교 내 시설·설비의 공유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또는 협약서(안)」을 중앙에서 작성한 후, 시·도 그리고 개별 지역의 교육생태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협약서, 지침·규정 등의 작성 시 학교 교육기능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함께 학교와 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감하게 학교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시흥시의 경우, 공동협력센터인 시흥시행복교육지원센터가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시청 관련 사업과의 연계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학교행정시스템에 맞추어 시흥시 교육사업의 접수 및 매칭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통합공모)을 운영하고 있다.

③-2. 방과후학교장 제도의 도입

"방과후학교장"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표준협약서에 있어서 사용인 측에서 해당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책임적 권한을 가짐과 함께 이에 따른 사실 또는 법률적 관계의 책임을 지는 특정인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은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장을 '방과후학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장은 일정 수준 기존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선은 가능한 지역부터 연구학교제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 후 그 성과를 확인하며 확대 적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교가 그리고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시·군·구와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여지도 없이 교부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시·군·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역과 교육을 양분 짓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당 지역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협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화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동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다. 동 규정을 개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교육경비 보조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3-4. 방과후활동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허용에 대한 재검토

학생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의 기재를 못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기제를 제거한 것과 같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꿈의 대학 등과 같이 유사한 활동임에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칫 방과후학교 활동들이 유의미한 학교생활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오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5. 교육지원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영역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유사 수준의 자치권 행사 권한 부여

시·군 및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온전한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일반행정기구)과 교육지원청의 장 사이의 법적 권한이 다른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즉, 시·군·구의 장은 독립적인 자치구의 수장으로서 독자적인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반면에, 교육지원청의 장은 시·도교육감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부분적인 권한만을 갖는 차이가 있어서 상호 동등한 수준에서의 협의와 합의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자치의 시도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용이하지 않은바, 유사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유사 지방교육자치"라고 함은 시·도 수준의 지방교육자치와 같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 교육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민선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하되 위임한 교육감의 권한을 상당부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치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장의 임기를 일정한 기간 보장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에서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을 배제함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 지자체에서 카운트파트너 권한의 명확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방교육자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6.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법제화

현재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의 행정지침(교육부 고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방과후학교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연계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또는 내실화를 위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운영,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 왔으나 이는 실질적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보라기보다는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실패에 그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가 국가, 지역 차원에서 보다 많은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유의미한 학습경험과 온전한 성장을 위한 방과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재정지원의 근거를「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 발표 2

해외 방과후활동 사례와 시사점

박 동 국

(서울시 교육자문관)

주제발표2

해외 방과후활동 사례와 시사점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1.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아동 자살의 주요 원인인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어린 시절을 사실상 박탈하는 경쟁이 치열한 교육 조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여가, 놀이 및 신체운동을 위한 자유롭고 안전한 시설의 심각한 부족과, 불충분한 여가활동은 오락을 위한 스마트폰 남용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교육전문가나 교육학자들이 지적했을 것만 같은 위의 글은 국제기구인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2019년 10월 3일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를 밝힌 글이다.

“제 친구들은 쉴 틈도 없이 공부만해서 주말에 만날 수도 없고, 만약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집을 들고 나옵니다” [3]

2019년 11월 19일 저녁 TV생중계로 진행된 ‘2019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영상으로 보내준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관련 중·장기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8년에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4]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2)UN CRC. 2019.10.0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3) 2019.11.19. KBS 방송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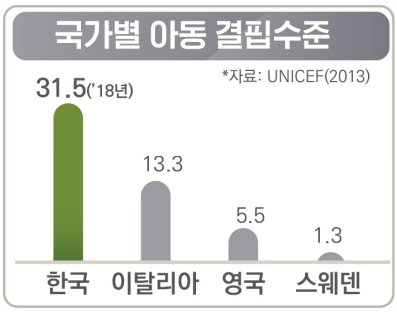
4) 보건복지부는 2008년, 2013년에 이어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18년 제3차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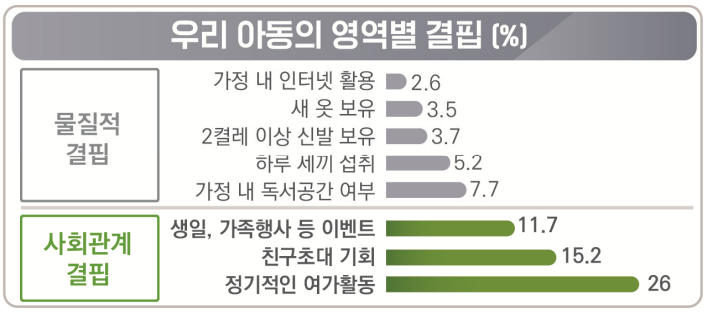
“아동이 방과후 희망하는 활동과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학원이나 과외로, 희망한다는 응답보다 실제로 하고 있는 응답이 약 28% 높게 나타남.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실제로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약 19%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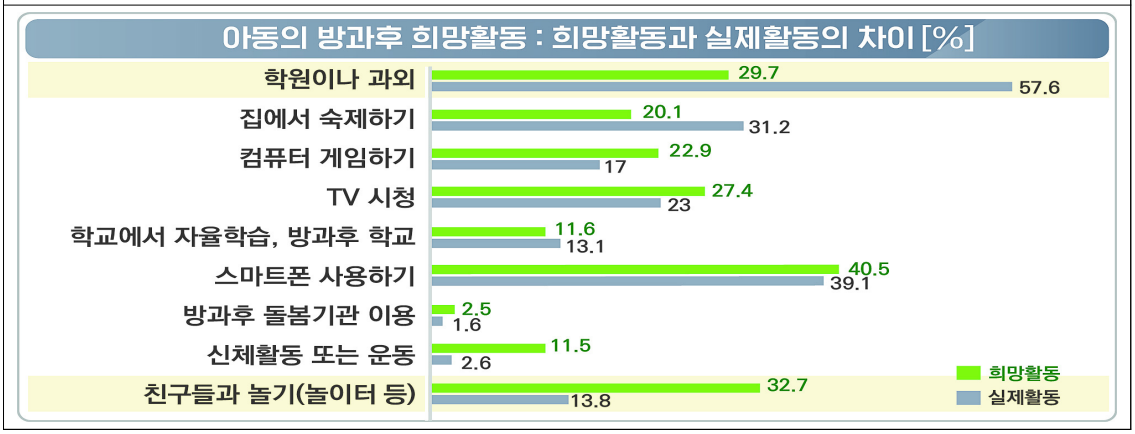
“아동의 삶의 질 및 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서 여가 및 놀 권리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놀 권리를 생활공간에서 아동의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 권리의 자원과 공간 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함.”

<2018 아동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①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 수준
② 청소년기 친구의 수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 (7.8 → 5.4명)
③ 물질적 결핍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적 결핍은 높은 수준







UN과 한국정부에 이어 한국교육의 위험신호를 경고하는 내용은 외국의 한국관련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곤 한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2013년 12월 4일자)에 의하면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 등 한국 학생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라고 한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히 보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실태조사는 2020년-2024년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임.

초등학교 입학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12년에 걸쳐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충분하지 않은 여가시간(여유있는 방과후 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12년의 긴 레이스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적 목표인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은 대학입시에 가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인해 상실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폐해는 학습의욕의 저하와 함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지속되어 왔으나, 과거 정부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 개혁의 두려움과 국가적 혼란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와 더불어 각종 사회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기에 이르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비상사태 그 자체인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기구가 볼 때나, 학생 스스로 본인의 삶을 얘기할 때나, 정부 스스로 내부를 볼 때도 교육문제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국의 교육문제와 청소년문제를 일부 영역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2. 한국의 방과후학교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1993년 9월 1일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26년간 교직에 있었던 경험과, 4년간의 서울시 도봉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도봉구 혁신교육지원센터장 및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겸임) 및 2년째 서울시 교육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나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현재 한국의 방과후학교 정책은 혁명적 혁신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란 용어는 정규교육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는 뜻인데, 법으로 정해진 정규교육시간 이외에 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을 또 시키고 있는가?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주당 40~60시간으로 OECD 23개국 평균 33시간 보다 7시간 길고 최대 2배의 차이가 나고, 이는 여가시간·신체활동·수면시간의 부족으로 이어져 우울증과 자살률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좋아하는가?, 정규수업이 끝났는데도 학교에 계속 남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가?, 방과후학교가 맞는가? 방과후활동이 맞는가?

정부에서 도입한 방과후학교 정책이 학생들의 희망과 선택에 의해 출발하였는가? 학생들의 선택인가 어른들의 선택인가?

헌법[5]과 교육기본법[6]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전인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방과후학교로

실현되고 있는가?

혹시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사는 방과후학교 정책을 좋아하는가?
왜 사교육경감대책이 방과후학교여야 하는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정책은 없는가? 방과후에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오는 것이 사교육경감대책인가? 방과후학교가 정말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여론조사[7]>

〈표 Ⅲ-49〉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1999~2001, 2017~2019)

(단위: 명(%))

사교육 실태 변화	2019		2018		2017		2001		199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줄어들었다	26 (0.7)	3 (0.4)	49 (2.5)	16 (3.1)	20 (1.0)	8 (1.7)	9 (0.7)	3 (0.7)	42 (2.8)	19 (3.0)
다소 줄어들었다	202 (5.1)	41 (4.9)	411 (10.6)	67 (13.2)	209 (10.5)	65 (13.7)	145 (11.4)	42 (9.9)	404 (26.8)	171 (27.4)
별다른 변화가 없다	**2,076 (51.9)**	**404 (48.5)**	**1,154 (57.7)**	**262 (51.6)**	**1,276 (63.8)**	**302 (63.4)**	**360 (28.4)**	**122 (28.8)**	**715 (47.4)**	**298 (47.8)**
다소 심화되었다	1,234 (30.9)	265 (31.8)	398 (19.9)	109 (21.5)	313 (15.7)	62 (13.0)	342 (27.0)	112 (26.5)	242 (16.0)	92 (14.8)
매우 심화되었다	462 (11.6)	120 (14.4)	188 (9.4)	54 (10.6)	182 (9.1)	39 (8.2)	351 (27.7)	137 (32.4)	106 (7.0)	43 (6.9)
잘 모르겠다 (2001 이후 제외)	-	-	-	-	-	-	60 (4.7)	7 (1.7)	-	-
계	4,000 (100.0)	833 (100.0)	2,000 (100.0)	508 (100.0)	2,000 (100.0)	476 (100.0)	1,267 (100.0)	423 (100.0)	1,509 (100.0)	623 (100.0)

3. 방과후학교에 관련된 각 주체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학생: 방과후에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 뺑뺑이 그만 돌려라!!!, 재미있는 활동을 할 곳이 없다
학부모: 아이들을 맞길 곳이 없다, 방과후에 공부좀 했으면, 학원 말고 보낼 곳이 없다
교사: 방과후까지 교사가 책임져야돼?, 방과후는 지역에서!!!!

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6)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연구보고 RR 2019-27. 한국교육개발원. 국민 4,000명이 설문에 참여

교육청: 늘 하던 대로~, 지자체가 다 가져갔으면~
지자체: 왜 이걸 우리가?, 마을에서 책임지는 방법이 뭐지?, 돈이 없어요~
교육부: 늘 하던 대로, 방과후학교는 교육활동, 교육부에 방과후돌봄정책과가 없어지면 안되지~~

이처럼 방과후학교에 대해 교육주체들의 생각은 참 다양하다. 방과후에 쉬고 싶은 학생들,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방과후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방과후정책의 개선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교육청, 방과후학교가 학교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 방과후학교를 사교육경감 대책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여가생활로 한 단계 발전시키지 못하는 교육부 등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은 이제 대한민국 학생·청소년의 일상적 삶에 주목하는 쪽으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방과후학교와 방과후활동의 차이점

<방과후학교와 방과후활동 비교>

	방과후학교	방과후활동
법적근거 유무	법적근거: 없음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법적근거: 있음 -청소년기본법 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 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입시기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방과후 교육활동 도입→2004년 사교육비경감대책	2005년 방과후아카데미 시범운영 →2006년 전국 확대
개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목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지역사회 등 운영주체 다양화	민주시민으로서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발달 도모
운영주체	학교, 교육부(교육청)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 여성가족부

법적근거: 현재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 어느 법률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이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규교육이 아닌 방과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정성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방과후활동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으로 존재한다.

개념: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과후활동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활동으로 규정한다.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또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이제는 깊게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목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이 목표이고 방과후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교육비 경감이 방과후학교의 우선적 목표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운영의 주체이고, 방과후활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이다. 학교는 정규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방과후학교를 학교가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방과후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260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대상이어서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 스웨덴 방과후활동의 특징[8)]

1) 국가와 부모가 공동의 책임과 협력으로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퇴근시간은 프리티즈헴[9)](fritidshem, 레저타임센터)의 종료시간에 맞추어지며, 프리티즈헴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원화된 방과후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뮌이 방과후돌봄정책·사업과 관련된 계획, 실행, 예산 등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1996년부터 학교에서의 모든 방과후학교활동이 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운영기준이 통일되어 더욱 안정적이며 일관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8) 한국교육개발원(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 분석 참고
9) 스웨덴어로 자유의 집, 여가의 집으로 불린다.

3)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2011년에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하고 방과후돌봄 관련 인력에 대한 기준체계를 높였다. 여가지도교사(leisure-time pedagogues)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공 180점을 이수하고 장기간 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하여 학교 정규수업 시 학교 교사와 협업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아동의 관점과 발달 상황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동 중심의 아동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에게 충분한 유식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리티즈헴들은 아동의 체력증진을 위해 매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통상적으로 여가지도교사 1명이 아동 12.3명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핀란드 방과후활동의 특징[10][11]

1) 핀란드 미성년자의 89%가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미활동을 하는 미성년자의 절반 이상이 스포츠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 그룹의 종류는 하키, 육상, 축구, 승마, 댄스 등이 있다.

2) 핀란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교회나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에서 아동의 교육이나 활동을 책임진다. 또한 숲이 국토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트래킹을 하거나 채집활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선택지가 다양하다.

3) 방과후활동 뿐만 아니라 방과전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부모들의 출근 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늦어지면서 방과후는 물론 방과전에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2) 방과전 및 방과후활동은 지식교육보다는 지(智), 정(正), 의(義)를 고루 갖추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질 높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의 구성에 있어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3) 핀란드의 교육복지에 관한 입법은 사회복지 관계 법체계가 아닌 교육관계 법체계 내에 규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2020.1.29.)
11) 한국교육개발원(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 분석 참고

정되어 있다.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과 예산의 지원을 받아 실제 운영의 주체가 되고 기초교육법 및 국가에서 제시한 기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방과전 및 방과후 돌봄은 각 학교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을 하지만, 학교가 독점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시설 또는 그밖의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한다. 학교 내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교실만 제공할 뿐 실제의 운영은 학교밖의 기관이 전담하기도 한다. 아동과 방과전・후돌봄 담당자 사이의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 및 아동의 안정감 제고를 위해 담당자(전담인력, 강사) 장기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한다.

7. 독일 방과후활동의 특징[12]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에 대한 소개

1) 촘촘한 공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적으로 불리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는 중심 주체가 학교가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이다. 청소년청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주로 관할하는데 학교, 지역아동・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에서 방과후돌봄사업이 진행된다. 정규 교육활동 이후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과제를 학교 교육이 아닌 기타의 공적 사안으로 간주하여 학교 밖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들이 기능과 역할의 과부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학교 밖 돌봄과 교육은 외부의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하에 운영된다. 운영의 주체들은 오래된 사회교육학의 전통에 기초한 정규대학 전공자들로서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들은 정규 대학교육의 석사급 전문인력들로 준공무원 이상의 안정된 지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3)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 등을 통하여 결핍된 삶의 경험을 보충해 주는 독일의 방과후돌봄장치들은 전통적으로 자기형성을 의미하는 Bildung 개념에 뿌리를 둔 독일의 전형적인 교육철학으로부터 기인한다. 청소년청이 제공하는 방과후돌봄 등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데 목표를 둔다. 풍부한 여가 및 문화시설 제공, 음악 및 미술 등과 같은 문화 예술적 체험, 여행과 같은 낯선 자연 및 문화에의 접촉 등은 바로 Bildung을 위한 중요하고 가치있는 소재이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에 대해서[13]

12) 한국교육개발원(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 분석 참고

2002년 집권에 성공한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초등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이후 2003~ 2009년까지 ‘교육과 돌봄의 미래’라고 하는 전일제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함께 독일의 주연방 교육문화장관들의 협의회가 마련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합의한 전일제학교의 일반적인 기준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전일제학교는 주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 점심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학교가 학생의 관리에 있어 책임 주체이다. 넷째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 사교 활동, 만남, 의사소통과 자기만족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일제학교의 세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①의무형 전일제: 모든 학생이 주당 최소 3일, 1일 7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
②부분 전일제: 학급 및 학년 단위로 참여하는 유형
③개방형 전일제: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유형

독일에서 전일제학교는 2002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16.3%인 4,951개교에서 연 평균 3.7%대의 확대를 거듭하여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수의 64.6%에 달하는 17,714개교가 전일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3%(1,757개교)에서 55.6%(8,533개교)로 확대되었고 전일제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수의 변화는 9.8%(873,935명)에서 39.3%(2,820,157명)으로 확대되었다.

8.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과 제언

한국과 달리 외국의 방과후정책은 방과후에 대한 개념과 정책에서 매우 청소년친화적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 깊게 배어있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은 그들이 더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방과후 시간, 방과후 활동은 교육의 연장선에 있지 않고 여가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의 주체와 권리는 학생과 청소년 스스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마을 곳곳에 촘촘한 방과후활동 인프라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는 현재 한국의 방과후활동과 비교하여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3개국 공히 국가와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 아이들을 키운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산과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법인), 청소년단체, 종교시설 등과 같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3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구

13) 한국교육개발원(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 분석 참고

분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학교를 관할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 즉 코뮌의 중요사무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학교교육과 방과후활동인 것이다. 또한 방과후활동의 주요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가생활과 신체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민주시민으로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삶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별도의 전문교사들이 자격을 갖추어 학교의 교사들과 협업하여 방과후활동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활동 시설의 대부분은 공립위주의 시설이나 일부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기도 한다.

학교와 학교 밖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본인의 사무로 규정하고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그 발상의 전환은 바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상적 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5년부터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모델로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26개 기초지자체 중 167개가 참여하고 있어 향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모델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의 강화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결국 자치분권의 강화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26개 시·군·구 지역의 약 40%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는 지역의 학교가 폐교나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자치(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지역의 주민이자, 몇 년 안에 지역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공간을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따라 읍·면·동 마다 1개 이상씩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주제 발표 3

서울형 방과후활동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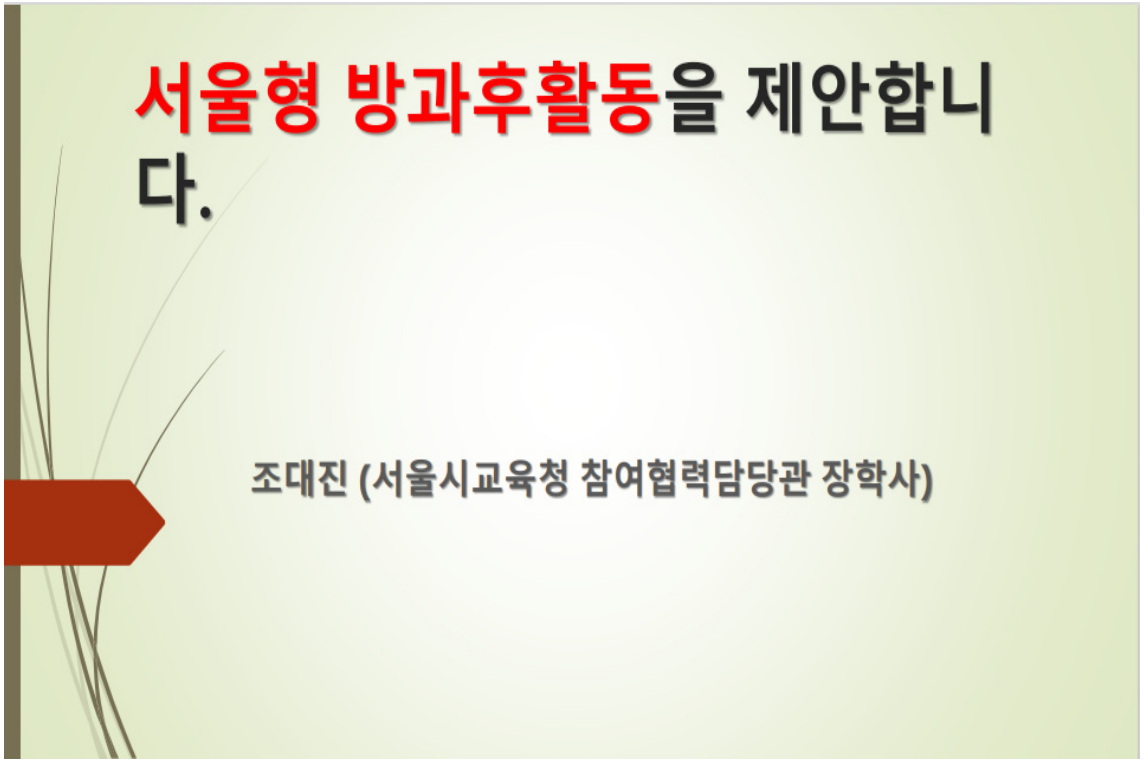
조 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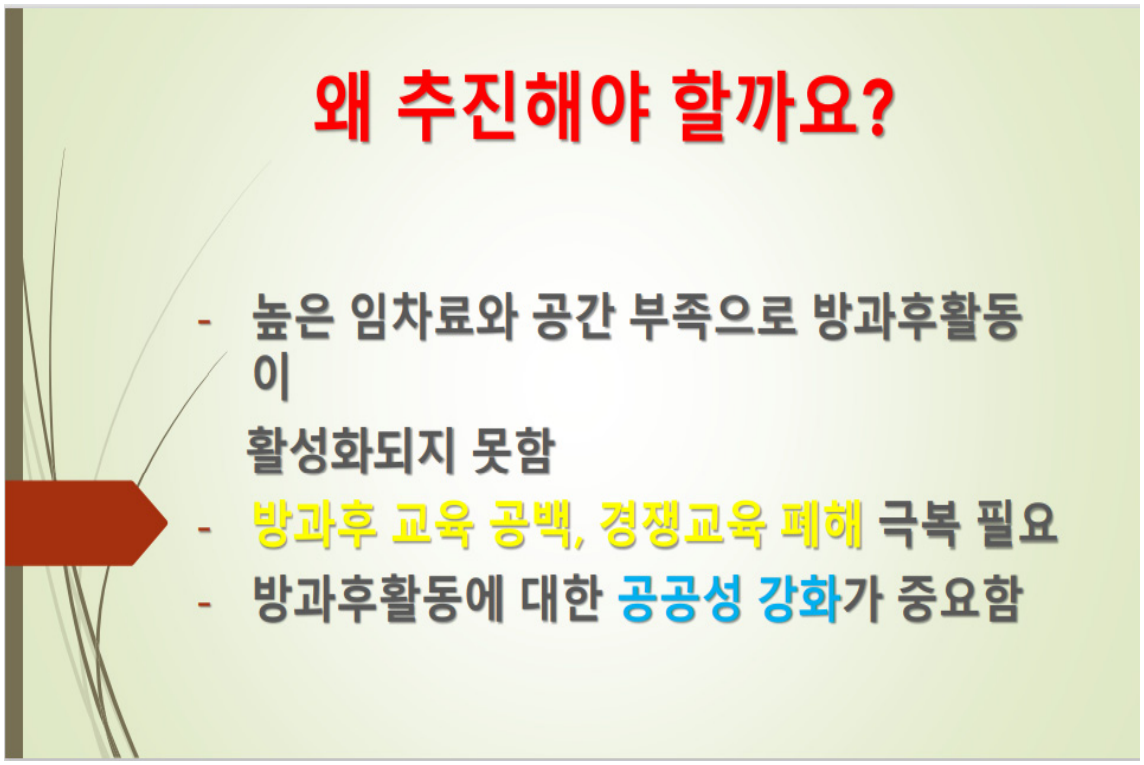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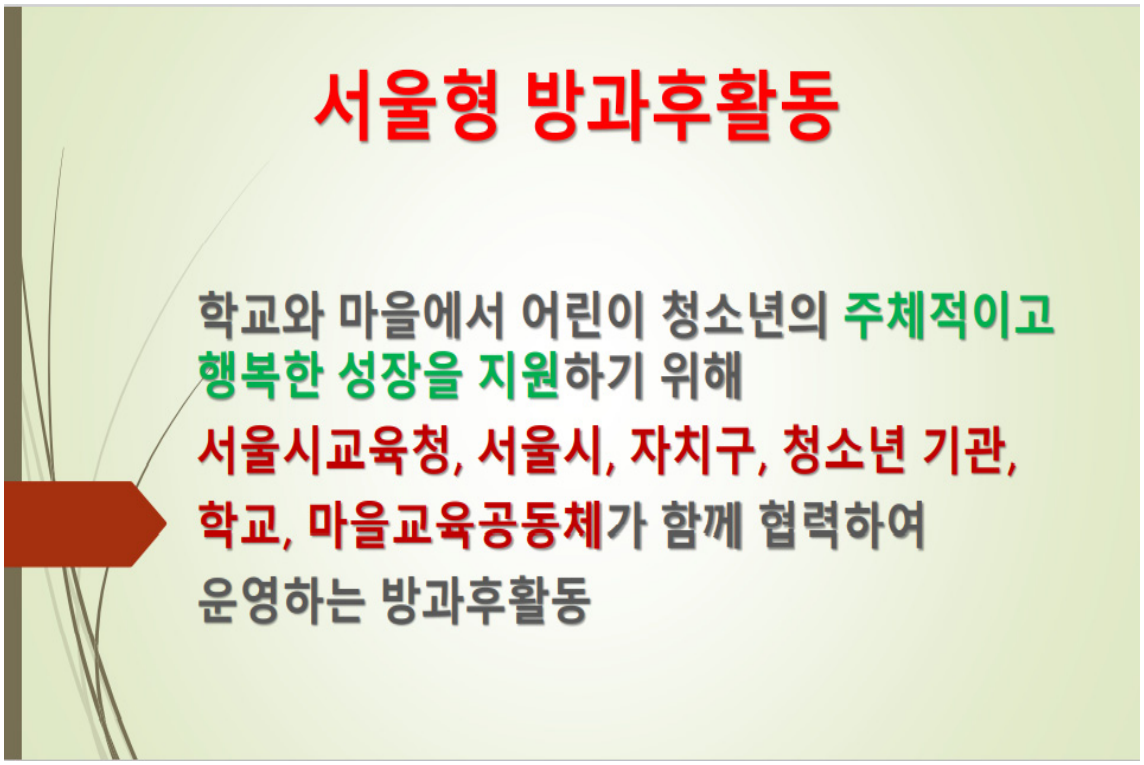
주제발표3

서울형 방과후활동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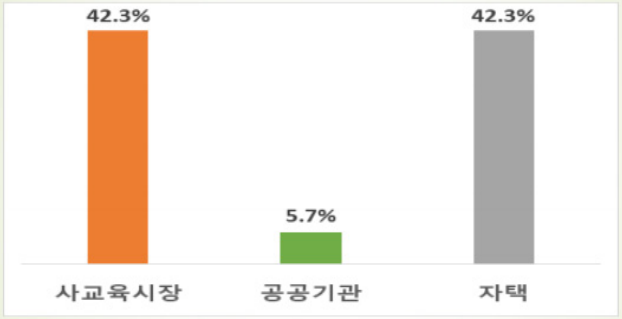
조 대 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왜 추진해야 할까요?
- 높은 임차료와 공간 부족으로 방과후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함
- 방과후 교육 공백, 경쟁교육 폐해 극복 필요
- 방과후활동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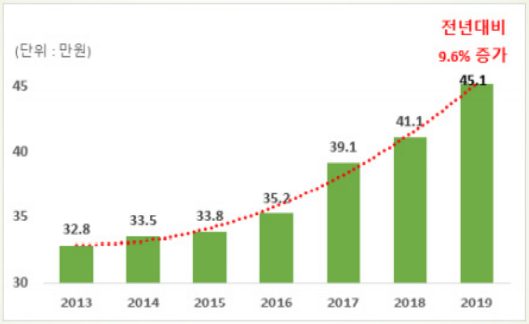

서울형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 기관,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활동

학생들은 방과후에 어디에서 머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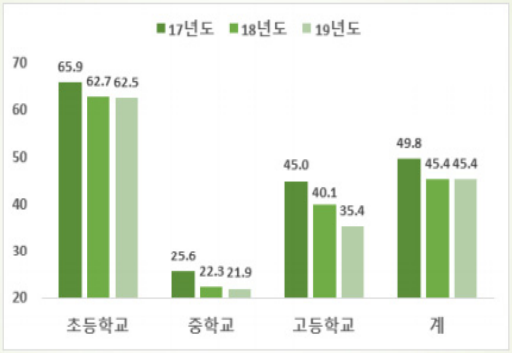
방과후(4시부터 7시 사이)에 주로 사교육시장이나 자택에서 머뭄
- 방과후활동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부족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



사교육비도 증가하여 학생 1인당 45만원이 넘음
(2019 사교육비 조사, 교육부, 통계청)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감소하고 있어요



돌봄 기능의 저학년 방과후학교와 보충수업 성격의 방과후학교 이외에는 전반적 감소 추세

방과후학교란 무엇인가?

-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활동 (2020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서울교육청)

방과후활동이란 무엇인가?

- **방과후활동**

학교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기본법 48조의 2)

서울 방과후활동 운영 현황

주요사업	규모	대상	운영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	50개소 ('22년 400개소)	초	1,381명
방과후 아카데미	21개소 (청소년 센터 내)	초,중	1,000명
지역아동센터	434개소	초,중,고 (취약계층)	11,828명
청소년시설	89개소(시·구립)	초,중,고	20,000여명
혁신교육지구(마을방과후)	25개구	초,중,고	17,000여명
시립시설 현장체험	121개 시설	초,중,고	1,501개 프로그램

서울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기관		대상	전체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방과후학교	초등교육과 방과후돌봄지원팀	초	422,122	262,738	62.24%
		중	209,311	40,835	19.51%
		고	236,262	81,670	34.57%
		계	867,695	385,243	44.40%
초등돌봄교실		초1	72,004	19,701	27.4%
		초2	69,266	15,423	22.3%
		초3	69,883	6,916	9.9%
		합계	211,153	42,040	19.9%

학교-지역사회 분리 운영의 문제점

-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
- (학교) 방과후학교 돌봄 행정 인력이 없어 학교 업무 부담 가중, 비 전문적 운영
- (마을) 홍보 수단, 공간이 부족하여 참여 인원이 적은 편임

서울형 방과후활동 방향 제안

학교 따로, 마을 따로	➡	마을이 품어주는 새로운 서울형 방과후활동
방과후 공공성 부족, 사교육 편중	➡	온마을이 책임지는 서울형 방과후활동

서울형 방과후활동 체계




서울형 방과후활동
학교내 방과후학교
마을 방과후학교
기초학력,
생태전환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삶의 기본을 익히는
방과후활동
학교 공간 활용
방과후학교
마을 단체, 기관
공방, 청소년센터 등
마을 방과후활동
진로활동,
마을 봉사활동,
전문가 과정 등
주체적 삶을 위한
심화형 방과후활동
청소년의 방과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서울


서울형 방과후활동(돌봄)
학교교실/공간 활용
지자체 협업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학교돌봄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마을학교(교육/돌봄)
(교육청+지자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학교내 마을결합형 공유 공간 구축



미담학교에서
학교는 학생 성장의
장소인 동시에
방과후
청소년프로젝트
공간이며
주민 평생학습의
장이 됨

16

학교내 마을결합형 공유 공간(사례)



<니 키롱보르 학교>

노르웨이 베르겐 니 킹롱보르학교는 1924년 지워진 낡은 학교를 새롭게 개조,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낡은 학교를 개축하여 경사면에 국제 규격을 갖춘 체육관과 무대가 있는 공연장, 음악시설, 스포츠 문화센터를 집어 넣어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방과후에는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 스포츠센터 옥상의 원형극장은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17

주제 발표 4

학교공간을 방과후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오류중학교 운영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홍 제 남

(오류중 교장)

주제발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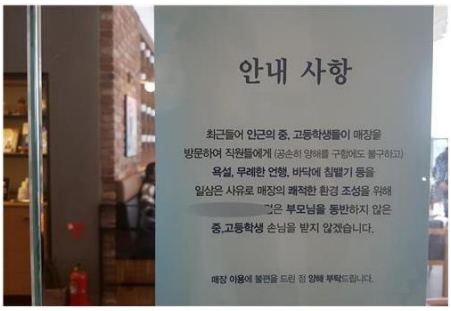
학교공간을 방과후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로
-오류중학교 운영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홍제남(오류중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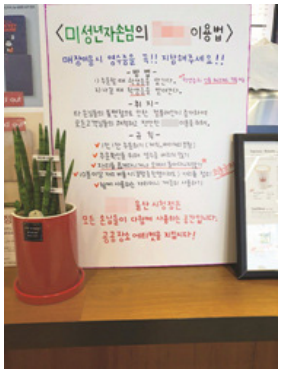
1. 문제 제기 : 갈 곳이 없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현재 행해지는 가정 또는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가? 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배움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 학생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상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넷, 방과후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섯, 대도시에서 공공재인 학교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이 아이들 가까이에 존재하는가?
여섯,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갈 곳이 별로 없는데, 공공재인 학교공간은 왜 닫혀있어야 하는가?

위의 질문들은 교육의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에 대한 것들이기도 하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함께 아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기본적인 조건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일과시간에는 나름대로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과제 및 공부하기, 동아리 모임, 운동하기, 취미활동, 특기 적성 계발하기 등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 공간은 아이들 주변에서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비용 지불 능력도 작지만 그와는 별개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소위 청소년 비하성 용어인 ‘노스쿨존’ 이나 ‘노급식존’ 과 관련된 기사들이 수시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18.4.20.)



(출처: 울산신문, 2019.12.25.)

이런 사회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의 본질은 학생들이 마음 편히 쉬고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맨 앞에 제기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안 모색 : 지역사회학교로서 학교 위상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와 제11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생략-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생략-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청소년활동시설이 제시되어있는데, 제11조 제①항의 3을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청소년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매우 드문 상태이다. 특히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을 시계추처럼 반복하여 오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동네의 pc방이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방과 후에 내내 비어있는 학교공간이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과정이라 생각된다.
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장점과 더불어 책무성 또한 부여받는다.

첫째, 학교공간은 명확한 공공재이다.
둘째, 학교공간은 매우 안전하고 쾌적하다.
셋째, 학교공간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다.
넷째, 학교공간은 별도의 시설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
다섯째, 정규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여섯째,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곱째, 평생학습의 당위성이 점점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할 책무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낮시간의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면 오후 시간과 주말 내내 공간의 활용이 중지되어 버린다. 평일에도 교직원들이 퇴근하는 4시 30분(대부분의 서울 중학교)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을 동아리활동이나 모둠별 과제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
교직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만 학교에 있게 되는 상황은 학교로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좋은 학교공간이 방과 후에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대안은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적 관점에서 학교공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위상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지역사회학교로 학교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지역공동체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지자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정착하여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3. 오류중학교 지역사회학교 운영계획 사례

오류중학교는 서울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양천구 및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다. 청소년 공간 또한 인근에 구로구는 물론이고 양천구 소재의 학교들이 많아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는 적지 않은데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마을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들 몇 개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는 많고 구로혁신교육지구의 청소년참여자치활동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작년 3월부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청, 구로구청, 마을의 활동가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방과 후에 오류중학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협력 청소년자치배움터'를 조성·운영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본교가 2019년 9월 서울혁신미래학교로 지정되어 학교의 교사동을 개축하기로 결정되면서 계획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애초 주개방 대상인 정문 옆 정보관 건물을 증축하여 개방하려는 계획에서 교사동 개축으로 인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관에 대한 증축을 유보하고 대신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부터 작은 규모로 시범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현재 단계는 1) 공간조성: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2) 운영주체: 개축논의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준비TF팀을 다시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3) 교육청-구로구청 간에 이 공간의 운영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아래 참고자료들은 이에 대한 운영계획서로, <참고자료1>은 2019년 1학기에 작성한 제안서이며, <참고자료2>는 2020년 2월 오류중학교에서 방과후 청소년공간조성 관련하여 교육청과 구로구청에 시행한 공문이다. 공문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교육청 및 구로구청, 지역활동가들과 수시로 의견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

4. 나가며: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지향하다

2019년 3월 본교에 내부형공모교장으로 부임한 후 2년여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지역과 함께 한 일들 중에 의미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학교 뒤 나대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학교의 야외학습장 겸 안전한 통학로로 활용하게 된 일이다. 이 과정은 학교와 구로구청 모두 과감한 결단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교는 화단의 울타리를 안으로 들이면서 학교부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결단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학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학교 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안전한 보도를 만들고 학교 뒤 나대지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마을주민의 휴식처는 물론이고 오류중학교가 야외학습

장 겸 안전한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이 과정은 학교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택한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류중학교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고마워하는 마음은 매우 크다. 학교 주변 새롭게 조성된 통학로와 소공원의 이름은 학교구성원들의 공모에 의해 '오구오구 더불어 길'과 '오구오구 더불어 공원'으로 지었다. '오구 오구'의 뜻은 '오류중-구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단발적인 사업도 의미가 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을 방과후에 지역의 청소년 및 나아가 주민들과 공유하는 지역사회학교로의 전환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클 것이다. 교육적 효과의 제고는 물론 마을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적 문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공간을 마을과 공유하는 과정은 여러 도전적인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이 없는 곳에 새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언제나 지혜를 모아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 학교가 실제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참고자료 1>

[방과 후 학교공간 활용 방안](2019, 홍제남)

1. 추진 목적

1) 방과후 학교 시설을 지역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교육력 제고
2)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여 방과후에도 교육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3) 교육 생태계적 교육, 삶과 연계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함
4)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된 역량을 계발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 마련

2. 추진배경

1) 교육적 측면
-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할 때 가장 효과적임.
- 방과후에 귀가한 학생들에 대한 가정적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음
  (맞벌이 가정, 형제자매수 감소, 한부모 가정 등의 문제에 기인함)
- 이로 인해 학교를 마친 뒤인 방과후의 교육의 지속성과 돌봄 문제가 심각함
- 국내·외의 경우 지역사회와 공교육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커뮤니티스쿨, 의정부 몽실학교 등)

2) 시설 활용 측면
- 방과후에는 학교의 많은 시설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 반면, 지역의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방과후에 활용할 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혁신교육지구 등 지역사회협력 교육기관들은 활동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3) 문제 의식
- 학교에서의 교육 효과가 방과후에 이어지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방과후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이로 인해 방과후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부적응 및 일탈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큼
- 방과후에 학교공간을 지역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와 책임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3. 추진 방침

1) 모든 과정을 학교와 지역의 교육관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진행
(학교 구성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2) 실무적인 업무추진은 정규교육과정의 업무와 분리하여 진행.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및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양함)
3) 방과후에 개방된 학교 공간운영은 지역사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평생교육법 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④항에 대한 공동 검토 필요)
4)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치배움터의 활동 및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5) 개방대상: 정보관, 체육관(강당), 신관 일부(구 조리실 및 급식실: 리모델링 시 활용 가능), 운동장

4. 기대 효과

1)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온종일 돌봄 실현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지원
2) 학교교육에도 긍정적 전이 예측
3) 학교가 지역의 청소년 및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수행
4)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좋은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됨
5) 지역의 공동체적 문화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2>(2020.2)

청소년 자치·배움·돌봄과 마을 주민 평생학습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

『청소년 자치·배움·돌봄과 마을 주민 평생학습이 함께하는 청소년 공간』

2020 [가칭]꿈자람학교 운영 계획(안)

오류중학교

Ⅰ 근거

○ 평생교육법 제 29조 (학교의 평생교육)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평생교육 기회 제공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 계획(2019. 7. 5. 교육감 결재)

- 거버넌스 기반 청소년 마을교육활동 지원센터 추진(프로젝트형 교육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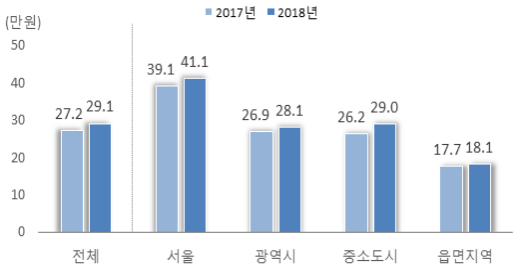
○ 학교 단위 공간혁신 개축 추진 계획(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 추진 방향 3, 자치공동체 실현 :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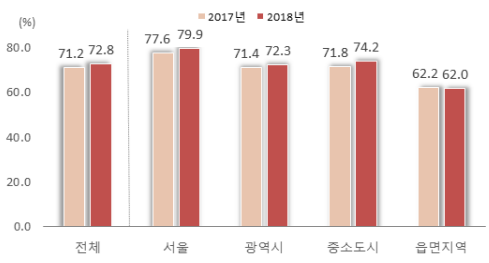
Ⅱ 배경

○ 청소년 방과후활동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 시장이 담당하고 있음(공적 영역의 역할 미흡)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 학생 사교육 참여율 -



○ **지역에 청소년과 주민들이 활용할 평생학습공간이 매우 부족**

- 본교가 위치한 지역은 구로구와 양천구, 부천의 경계지역으로 **구로구의 서쪽 끝에 있어서 구로구의 다른 시설을 쉽게 활용하기 어려움**
- 구로혁신교육지구 등 지역사회협력 교육기관들 또한 활동 장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 몽실학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공간 운영의 성공 사례**

- 국내·외에서 지역사회와 공교육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외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커뮤니티 스쿨, 국내: 경기도 몽실학교, 꿈의 학교, 충남 홍성 홍동중학교 등)

III 목적

○ **서울시교육청 지정 혁신미래학교로**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과 주민 평생교육이 함께하는 **학교 마을결합형 공간 혁신 모델 창출**

○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는 학교 위상 실현

○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진로 탐색 지원

IV (가칭)꿈자람학교 정의

꿈자람학교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활동 시간에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학습 공간이자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학교

- 청소년 자치 및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프로젝트 활동 공간

- **청소년 자치 활동 및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운영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활동 및 청소년 창업 활동 지원 공간
- **방과후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활동 및 학습 공간**
- 지역사회가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위기 학생을 함께 돌봄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학교 구축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별도 공간** 마련
- 지역의 인적 자원이 청소년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연계 운영

Ⅴ 기본 방향 및 방침

○ **청소년 주도성**: 추진과정부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공간기획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가칭]꿈자람학교의 **활동 및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진행 실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운영 주체와 분리**하여 추진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미칠 교육역량 손실을 최소화함

○ 추진 주체: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학교 구성원, 교육청, 지자체, 구로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며 진행

○ 운영 주체: **지역사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평생교육법 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④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대한 공동 논의 필요)

○ 서울시교육청 지정 혁신미래학교로서 오류중학교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혁신미래학교 모델 창출 및 공간 혁신 사업과 연계성 강화**

○ 마을주민 및 외부 청소년들의 개방 공간은 정보관(증축 추진), 체육관(강당), 신관 일부(1층 또는 정보관 쪽과 가까운 일부 공간), 운동장 및 학교 야외 학습장으로 함

○ 개방 대상은 **인근 초·중·고 학교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주민**(중학교:오류중, 고척중, 개봉중, 구일중, 경인중/초등학교: 세곡초, 매봉초, 덕의초/고등학교:고척고, 경인고, 구현고, 구일고 등(인근 양천구: 신기초, 금옥중, 강신중, 양천고, 금옥여고, 백암고 등)

○ 상시적인 청소년 활동 및 주민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 구축 과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로구청,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Ⅵ (가칭) 꿈자람학교 세부 운영 내용

1. 운영 내용

○ **청소년 자치**

- **청소년자치운영위원회 구성**

·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공간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자치 운영 시스템 마련

- **교육과정의 주체**

·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주제 선택 및 모든 행사 계획과 운영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제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함

○ **배움**

- **현상기반학습**

·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기반한 프로젝트 주제 도출, 계획 수립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교사들이 촉진하고 지원

- **진로 탐색**

·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문사회(역사, 외국어, 법, 경제, 독서토론), 자연과학(수학,과학, 생태환경), 문화예술(미술, 음악, 체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메이커 교실**

· 3D프린팅, 목공실, 재봉틀, 손공예 코너 등의 다양한 작업장 공간을 마련,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높이며 각자의 재능 탐색

- **놀이 및 신체 활동**

· 다양한 실내외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신체활동의 기회를 높여 청소년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증진(동아리실, 체육관, 운동장, 교사동 뒷공간, 노래방, 영화관 등)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교육**

· 학교-능골산(학교뒷산) 연결통로 설치로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 **공동체 활동**

· 어린이날, 마을 축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행사를 기획·운영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름

○ **돌봄**

- **청소년 카페**

·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든 편안하게 쉬고 만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쾌적한 청소년 카페 조성·운영

- **공동 돌봄**
  · 마을에 흩어져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아이들에 대한 상시적 돌봄 구조 마련(상담사, 사회복지사, 마을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과 연계)

○ **지역 주민 평생교육**
- 주민 활동 공간
  · 정보관 재구조화와 증축을 통해 낮 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회의, 모임, 독서활동 등)
- 주민 교육 공간
  · 강의, 토론, 발표회, 교양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제공

2. 자치 조직(거버넌스) 구성 운영

○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배움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치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회 구성

○ **공간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치조직 운영**

○ 청소년 자치회 구성
- (가칭)꿈자람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로 자치회 구성, 대표 호선

○ 운영위원회 구성
- 청소년 자치회 대표, 길잡이 교사회 대표, 운영팀 대표, 교사, 주민, 학부모 대표 구성
-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이 되도록 구성

○ **(가칭)꿈자람학교 운영 센터 설치** 통한 공간 운영 및 관리 전담
- 구청,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통한 운영 주체 설치 및 운영

3. 안전 관리 방안

○ **학생 안심 설계 및 공간 배치**
- 공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과 외부인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설계
- CCTV, 이용자 안심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 학교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 공간과 비개방 공간의 명확한 구별

○ **별도의 안전 관리 인력 지원 및 보험 가입**
- 학교 보안관 배치, 지역 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등
-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이용자 학습활동에 대한 안전 보장

○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 학생 안전교육, 이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 길잡이교사 대상 응급처지 및 안전교육 강화

4. 길잡이 교사 운영 방안

○ **길잡이 교사 역할**

- 청소년들의 공간 설계 참여 지원
- 청소년 주도 학습 설계 및 운영 지원
- 청소년 주도 학습 관련 전문가 연결을 통한 심화교육
- 참여 학생 소통 및 관계 형성 지원
- 청소년 주도 학습 참여자의 안전 책임 지도
- 자치조직 참여를 통한 운영 지원

○ **길잡이 교사 참여 대상**

- 지역에서 청소년 주도 학습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내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 청년 중에서 희망을 받아 위촉

5. 공간 구성 방안

○ **정보관 증축(2층 ➠ 3층, 혹은 4층)**

○ (가칭)꿈자람학교 구성 범위

- 체육관, 정보관, 신관 일부 공간(정보관 인접 공간-(구)조리실 등)

○ (가칭)꿈자람학교와 학교 공간 분리

- 수업 시간에는 정보관 증축 공간(주민공간) 이외에는 미개방
- 정보관 내 주민 공간과 학생 공간 분리하여 안전 확보

Ⅶ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

○ **구축 예산 지원** : 서울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청 대응 투자

○ **학교 마을결합형 공간 구축을 위한 건축가 지원** : 서울시교육청

○ **(가칭)꿈자람학교 공간 구축을 위한 실무 인력 지원** : 구로구청

○ **(가칭)꿈자람학교 공간 구축·운영을 위한 TF 운영** : 서울시교육청

○ **(가칭)꿈자람학교 공간 구축 후 운영 센터 설치** :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Ⅷ 기대 효과

○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청소년 활동 공간 모델 창출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 계획 실현 모델 구축(청소년 마을교육활동

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구현)

○ **청소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마을결합형 혁신 공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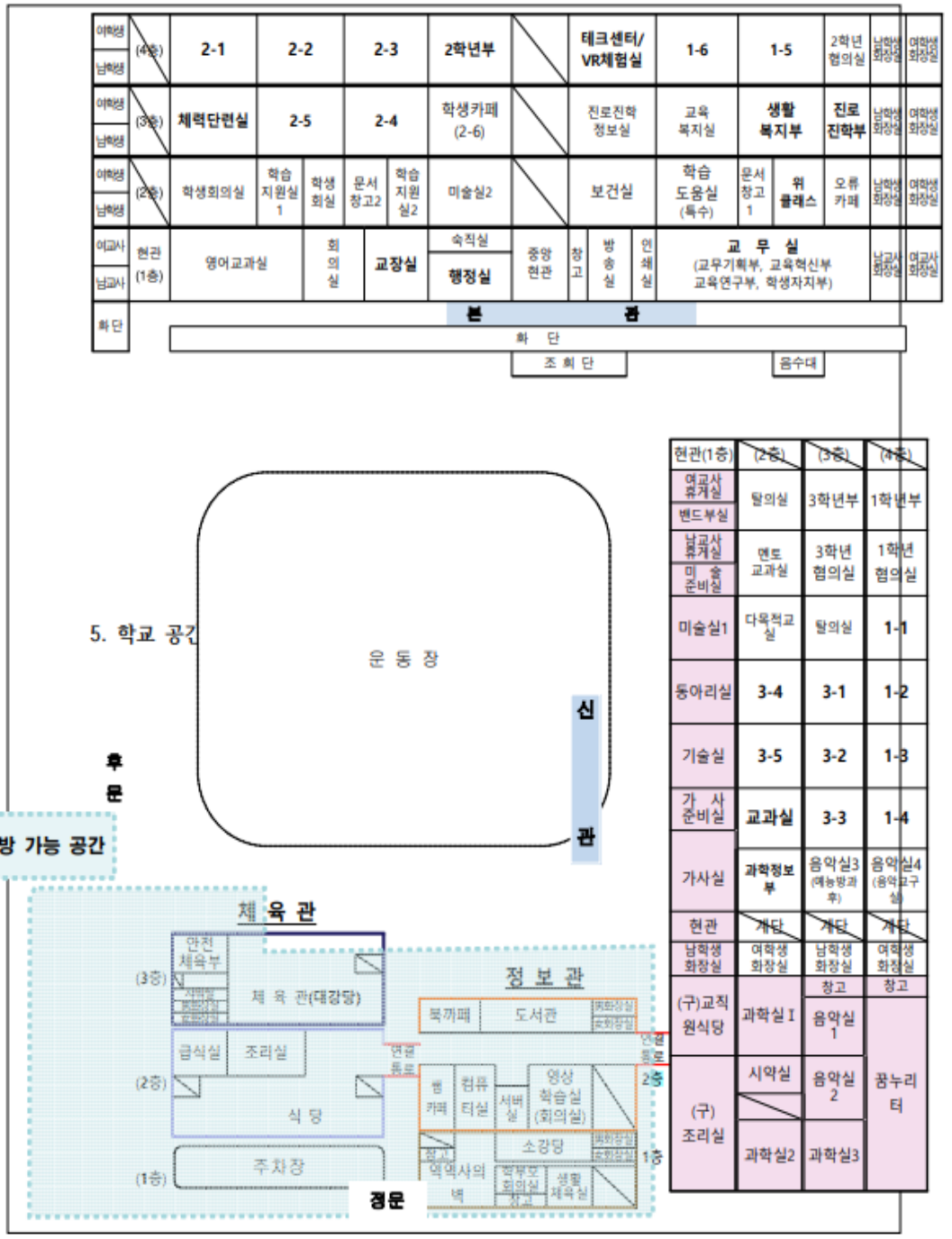
○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온종일 돌봄 실현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 제고

○ 학교교육으로 긍정적 전이가 기대되어 정규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및 진로탐색에 기여

○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좋은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자본 제고에 기여

2020학년도 오류중학교 배치도



주제 발표 5

방과후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 공원

이 승 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주제발표2

방과후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 공원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1. 노원구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소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터”라고도 부릅니다. 노원구립 청소년시설이자, 도서관입니다. 공릉동 동네 아이들의 쉼터, 놀이터이자, 배움의 공간입니다. 주로 방과후와 주말에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방학이 아닌 평일에는 3시 이후에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단체로 청소년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공터에 오는 보통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후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옵니다. 와이파이를 잡기위해 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노래방, 비디오게임 등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찾아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옵니다. 또 개설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간을 빌리러 옵니다. 친구, 청소년지도자, 선배와 동생 등 사람을 만나기 위해오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 옵니다. 학교 과제 해결, 시험공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회에서 일하기 위해 오는 청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공터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사서, 어린이사서, 유스카페 운영진 등의 여러 청소년 자치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공터는 청소년 뿐 아니라 주민들과도 함께 마을 교육력을 회복해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새 시대 청소년 공간(청소년시설, 도서관 융합)

공터는 청소년시설과 도서관이 함께 설치된 복합시설입니다. 공터는 “청소년을 중심에 둔 도서관이자, 마을의 교육력을 살려내는 청소년센터”입니다. 공터의 일꾼들은 청소년시설과 도서관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공간과 서비스, 전문성을 융합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공터는 새 시대 새로운 청소년 공간으로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공터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공터의 일꾼들은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해법을 논의하고, 풀어갑니다. 공터의 분명한 한계는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극복되어왔습니다. 공터의 운영과 활동 과정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경험의 나이테를 만들었습니다. 공터 둘레의 사람들은 여러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서로를 감동시켜가며, 마을 일꾼들을 발굴하고, 마을 리더를 길러 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곳곳에서 사회적 자본,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터 또한 연결된 시민들로 인해 점점 성숙해왔습니다.

◆ 일상, 놀이의 재해석

공터는 최신의 유행, 중심의 화려함과 특별함만을 쫓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일상과 마을은 청소년에게는 온 세계, 우주와 연결되는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일궈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놀이는 “누구나 삶의 주인임” 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활동입니다. 공터는 너무 익숙하고, 비생산적이라고 하찮게 치부되는 마을과 일상, 놀이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왔습니다. 공터의 동아리활동, 시작된변화, 책모임, 놀이기획단, 자치활동, 학교밖청소년 프로젝트 등 모든 활동은 평범한 일상과 닿아있고, 놀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마을 청소년들은 공터에 모여서 놀이하면서 “새로운 나” 를 발견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을 이기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자발성과 낙관의 태도, 공동체적 경험을 통한 인류애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 새로운 교육적 아이디어 실험

공터는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제도화로 경직된 학교에서 쉽사리 감행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실험이 공터에서는 훨씬 더 쉽고, 가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터의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는 공교육 현장의 혁신과 공공영역의 변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배움, 프로젝트 활동, 메이커교육, 학교밖청소년 활동,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매년 공터를 찾아와 배우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 담론화

공터는 현시대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명문학교, 뛰어난 교사와 리더, 질 좋은 프로그램과 훌륭한 서비스, 멋진 시설에 있기보다 평범한 이웃들의 만남과 관계에 바탕을 둔 “마을 교육력” 의 회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방적 수혜자, 소비자가 아닌 마을의 공기를 바꾸는 생산자로서 청소년과 주민을 초대하고,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작은 사람들

이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약한 것들을 돌보며, 작지만 소중한 약속들을 지켜가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지난 10년간 꾸준히 궁리하고, 뭉근하게 실천해왔습니다. 공릉동의 공동체 문화는 점점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일궈낸 변화를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담론도 차근차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2. 방과후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 공원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에 개설되고,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이고, 돌봄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공터와 공릉동 사람들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탐구자로 살아야 하고, 마을은 학습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방과 후 생활 속에서도 주체이자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소비자로만 있기보다 탐구자로 살 수 있도록 학교, 자치단체,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도울 수 없을까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몇 가지 구상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학교, 지자체, 마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학교가 해야 하는지, 지자체가 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한다.' 입니다. 학교에서 던지던 공을 지자체와 마을로 투수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질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 제공자가 누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을 학교 일과 이후 계속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대상자(소비자)로만 만날 것이냐?' 에 대한 것이 깊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 담임 선생님 청소년 활동, 이용시설 사용을 권장해주세요.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마을 속 청소년 활동 공간과 이용 공간, 예를 들어 문화의집, 도서관 등의 사용을 권장해주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도서관과 쉽게 친구가 되곤 합니다. 문화의집 근처에 살거나 친구들이 그 공간에서 놀면 자연스럽게 이용 패턴이 생기고, 공공시설의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수입니다. 방과 후에 어디에 가야 할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도서관회원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모두 학교에는 간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보십시오. 특정 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시설과 긍정적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역 공공시설 이용 경험에 격차가 생기도록 내버려두

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공공조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학교가 연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내해주세요.

공릉동에는 공터 이외에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원,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는 직접 운영하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방과후에 학교의 책임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이 실무적으로 협력하고, 조정해가며, 역할을 분담하면 더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을 사람들의 자율적인 방과후 활동을 지지, 지원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자녀들과 불암산에서 산을 타고, 놀이를 하는 한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들과 방과후에 불암산에 함께 가자고 했지만 모두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동네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안전과 신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터에서 이 학부모님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불암산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또 빠지기는 어려우니 다음번 산행으로 이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이 학부모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방과후에는 학원에 간다고 합니다.

◆ 마을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5명이 2020년 올해 공터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마을카페와 이상한 작업장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고교생 나이대의 청소년입니다. 물론 서울시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만약 고교 학점제 등의 과제와 만나진다면 급여 대신에 학점을 받고, 고교생이 지역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일 경험과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생 인턴이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방과 후에는 사회참여 활동을 해봅시다.

공터에서는 매년 70~8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일상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씩 해결해보는 활동입니다. 방과 후에 시간이 없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 활동이 자신 인생에 큰 의미가 되고 있어서 시간을 일부러 낸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방과 후 사회참여 활동을 학교가 권장하고, 생활기록부 등재 등으로 인정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능 중심 공정한 대입체제라는 데 방점이 찍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실행된 학교 밖 활동조차도 학생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 동아리 활동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공터에는 음악실, 댄스연습실, 작은 강당 등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성된 동아리들이 공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동아리 연습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터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친구나 선배 소개로 옵니다. 학교 밖 활동을 학교 선생님이 아실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공터와 같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 활동시설 및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협력적 동아리 활동을 설계해주세요.

◆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에 나누자

방과 후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에 나누는 일로 공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마을에 학교를 알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체화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을 테고,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역에 나눠보자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놀이터, 청소년센터 등 어린이, 청소년 공공시설이 확충, 개선되어야 합니다.

방과 후에 놀 시간이 없다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가야하고, 쳇바퀴처럼 짜여 진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요즈음 학교는 학교 공간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도 직장에 있으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도 만족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3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마을 내에 자유로운 놀이터, 쉼터, 배움터가 마련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시간을 학원에서만 보내지 않고, 마을 놀이터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점점 늘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없고,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개선되고, 부족한 공공 청소년시설이 확충 되어야 합니다.

◆ 학교 선생님들과 마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지역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마을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마을에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방과후 학생들의 삶이 펼쳐지는 마을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야합니다. 또 마을 내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일들을 펼쳐 가는지 관심가지고,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을 여행을 교사 연수로 짜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릉동 마을은 꿈마

을여행단이 있습니다. 공릉동 선생님들께서 희망하시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만 말고, 느슨한 돌봄은 어떤가요?

학교 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울형돌봄 키움센터 등으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공간들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돌봄공간들은 프로그램도 아주 체계적이고, 공간도 세련되고 안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돌봄 정책에서 **'방과후 어린이의 자유로운 삶'** 은 함께 고민되지 못합니다. 안전한 돌봄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을어린이, 청소년식당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공터와 같은 청소년 공간 인근에 시범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며, 행정이 지원해주는 공공식당을 만들면 어떨까요? 청년가게와 같은 일 경험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안전한 식당이 마을에 있다면,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고, 자녀는 느슨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을 환대하고, 기억해주는 편안한 마을식당에서 저녁밥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쉬고, 배우고,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